

## [ 오피니언 ]

## 금남로에서

정재현



얼마 전 가까운 지인들과 저녁 식사 모임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지방 공무원인 A씨는 “공무원 생활이 갈수록 힘겹다”고 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승진이나 업무능력 평가에서 연봉서열이 사라져 내부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25년 넘게 근무한 자신의 봉급은 10년 차 은행원보다 적은 데도 ‘철밥통’ 운운하며 공무원을 고깝게 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A씨의 말처럼 많은 공무원은 여전히 박봉 속에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 자체 실시 이후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로 대변되던 공직사회 환경도 크게 변했다. 공무원 비리도 지금은 많이 사라졌다.

## 끊이지 않는 공무원 부정

그럼에도,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왜 따갑기만 할까. 국민들이 해마다 끊이지 않고 터지는 공무원 부정부패 사건을 보면서 여전히 고양이에게 생선가

계를 맡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중앙 경제부처에서 30년간 근무해온 공무원이 공직사회 내부비리를 적나라하게 고발한 ‘광주 블루스’란 책을

## ‘광주 블루스’ 공직불신 어쩔 건가

펴낸 과장이 일었다. 이 책의 저자는 매년 엄청난 액수의 관공비와 출장비가 ‘가짜 공문’으로 집행됐거나 재경부 장·차관 등 고위직들이 퇴직 후 금융기관 근무를 위해 고임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다. 관교신도시 등 부동산 개발정보가 건교부 공무원은 물론 이들의 친·인척, 부동산 업자에게 사전 유출돼 투기에 이용됐다고 폭로했다. 수도권 집값 폭등의 원천이라 할 수 있는 신도시 투기 바람은 공무원이 조장하고 정부가 뒤늦게 투기단속에 나선 셈이다. 공무원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고을 수만은 없는 것

이다.

그런데 ‘과천 블루스’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광주판 블루스’가 터져 나왔다. 광주시 도시개발공사가 세하지역에 추진 중인 28만 평 규모의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정보가 사전 유출된 것이다. 일부 투기꾼과 부동산 업자들이 택지개발예정지구로 고시조차 안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발계획을 담은 도면까지 입수, 부동산 투기를 부추겨 땅값이 5배나 뛰었다.

시중에 유출된 개발도면은 광주시와 도시공사, 음역사 등 3개 기관만이 생산·보

영장을 청구하고, 여분이 악화하자 사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

물론 세하지구 개발 정보의 사전유출이 공무원에 의해 저질러졌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최종적 책임은 광주시가 질 수밖에 없다. 사업주체는 도시개발공사이지만 승인·감독 기관은 광주시이기 때문이다.

## 이해 못할 광주시 태도

‘광주판 블루스’의 전모는 날낱이 밝혀져야 한다. 이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이다. 묵묵히 자기 일에 충실히하면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대다수 공무원을 위해서도 사건의 진위는 가려져야 할 것이다. 직무 관련 부동산 정보를 투기꾼에게 넘기고 이를 과태료에 갖가지 불법을 일삼는 공직자가 사라지지 않는 한 선진 한국을 외친다는 건 어불성설이다.

행정가는 모름지기 언제나 국민을 엄두에 뛰어 한다. 이것이 공직자의 존재 이유다. 국민 위에 군림하거나 사익을 쫓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공복이 아니다. 공무원들은 공직사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이 왜 따가운지 곱씹어 생각해 봐야 한다. ‘광주판 블루스’가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새롭게 간다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논설위원〉 jhjung@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써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34/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 은펜클럽

류동훈



최근 대통령이 대통령4년 종임제 원포인트 개헌론을 제안했다.

우리당은 원포인트 개헌 찬성을 표하고 있다. 원포인트 개헌은 그것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우리당·한나라당·민주당·민노당 모든 정당은 2003년 총선 때 국민소환제를 정치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약속했었다. 국민소환제는 국회의원의 임기 중이라도 시민들이 투표하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있다면 그것으로도 임기 끝나는 날까지 성실하게 일을 하도록 하는 효과를 가지기 때문에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상징적인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지방정치인

되었지만, 아직 심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임기는 헌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소환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헌법에 국민소환제에 대한 근거조항을 넣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금 개헌안에 포함시켜 투표인트 개헌을 해야만 한다. 그런데, 개헌을 위해 국민들을 국민투표장으로 불러 모으겠다고 하면서, 국민소환제는 빼먹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밥통에 쌀을 넣어놓고 취사비용을 누르지 않으면 밥이 되질 않는다.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밭의만 하는 법률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국민소환제 개헌을 통과시키기 어려

되었다.

## 기고

최상준



칠순 고희 생일을 회사 가족들과 보내면서 내 생일에 얹힌 기억이 떠오른다.

내 생일은 음력으로는 1937년 12월 2일, 영력으로는 1938년 1월 3일, 호적에는 1938년 12월 20일이다. 모두 세 번이다.

지금은 대부분 양력 생일로 지내지만 흥역을 치러야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시절이 있었다. 아마 내 생일이 일년 후에 호적에 올려진 것도 그런 이유인 것 같다.

제일 자기가 잘 지내고 싶은 날은 생일일 것이다. 그렇게 보면 나는 생일을 지낸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한지붕 밑에 사는 가족들 중 음력 설날에 여섯 명이나 생일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1일은 조카, 2일은 나, 3일은 아버지, 8일은 형님, 15일은 어머니, 22일은 형

생일이면 서울에서 죽어 전화도 오고 한 집에 살다시피 한 며느리는 케이크를 들고 와 미역국도 손자들과 함께 하며 ‘Happy birthday to you’를 읊지 않는다.

한 해에 두 번의 생일상을 받은 적도 있다. 폐부 마주파주 여행 중 호텔 식당에 있는데, 나팔을 불면서 20여명이 촛불과 케이크를 들고 와 ‘Happy birthday to you’하고 생일축하 노래를 부르며 케이크를 내미는 것 아닌가.

내 생일을 주민등록증에서 보고 행사가 벌어진 것이다. ‘오늘 내 생일이 아니요’라고 할 수는 없고 일년에 생일이 세 번이나 있으니 그동안 지내지 못한 것을 외국에 와서까지 축하를 받는다 싶었다.

## 혹시 생일을 잊으셨나요

수 생일이다.

이때문에 어찌다 부모님이 “오늘은 너의 생일이다”면서 계란반찬을 해주면 그것이 죄고였다.

한번은 작은 누나와 싱겁게 싸웠다는 이유로 어머니께 매를 많이 맞아 움직이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어머니께서 해질 무렵 밥에 나가셨다 들어오시더니 눈물을 흘리며 “대단히 미안하다” 하시는 것이다.

“내일이 아버지 생일이고 오늘이 너의 생일인데 잊고 너는 때렸구나” 하시는 것 아닌가? 그 정도로 생일은 거의 모르고 지냈다.

결혼하고 난 뒤에는 아내가 가끔 미국으로 밥상에 올려놓았다. 아내의 생일은 양력으로 1월 1일이고, 나는 1월 3일이라 모두 양력 생일로 지냈는데, 자녀들이 결혼하고 손자들이 생기면서

요즈음 젊은이들이 자기 생일보다 잘 지내려는 날이 매월 14일이다. 1월은 수첩을 연인끼리 교환하는 디아리데이, 2월은 발렌타인데이, 3월은 좋아하는 여자에게 사랑을 주는 화이트데이, 4월은 짹 없는 외로운 이틀이 모여 자장면을 먹는 블랙 데이, 5월은 애인을 아직 사귀지 못한 이들끼리 노란 옷을 입고 카레를 먹는 Yellow & Rose day, 6월은 키스데이, 7월은 은반지를 주고받는 실버데이, 8월은 그린 데이, 9월은 음악 듣고 춤추는 뮤직데이, 10월은 포도주 먹는 와인데이, 11월은 오렌지데이, 12월은 연인끼리 포옹이 허락되는 허그데이 등 참 많다.

먼 훗날 이런 즐거운 날에 물려 자기 생일은 사라질까 우려도 된다.

나처럼 생일 잊고 지내는 사람이나 없으면 좋겠다. 〈남화토건(주) 부회장〉

은펜클럽은 매월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 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싣는 코너입니다.

## 개인 신상 관리하는 업무, 인력채용 허술 해서야

아내가 생활정보지에서 아르바이트 구인난을 뒤집어 미泔에 드는 곳이 있다고 해 살펴봤더니 약국 보조원을 채용한다는 광고였다.

광고는 ‘전산 및 조제 보조원’ 분, 경력 없는 초보도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약국 보조원은 환자들이 가져온 처방전에 나와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인데, 이처럼 채용 과정이 허술하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채용이 이토록 허술하다면 채용 후 관리는 더욱 문제될 것임 분명해 보였다.

질병과 관련된 민감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약국 보조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전산처리 업무라는 식의 인식을 버리고 엄격한 채용 절차를 두어야 하며 사후에도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준용·목포시 옥암동

시내에서 택시를 타다 보면 담배 연기로 쳐들어 있거나 청소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경우가 많다. 택시 실내 흡연 사례가 광주시내 택시들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당장 문화와 예한 민주화의 성지인 광주의 이미지를 생각해볼 때 외지인들을 맞이하는 택시들로서는 금연을 신경써야 한다.

택시 앞좌석 잘 보이는 곳에 붙어있는 ‘승하차시 승객에게 인사하기’ ‘승객에게 미소짓기’ ‘상냥하게 대화하기’ 등 택시고객 서비스 현장이라는 스티커는 요구하고자 한다.

승객들이 담배 연기 때문에 역겨워하니깐 택시기사들이 그나마 실내 공기를 순환시키기 힘들어 창문을 열다보니 추운 날씨에 짜증

도 나고 어린아이들은 감기 걸릴까봐 엄마들이 노심초사한다.

게다가 장거리 손님을 태우기 위해 단거리 손님을 박대한다던가, 또 서너 명이 태려울 때는 아예 근처에도 오지 않고 내달리는 경우가 많다. 운전자가 자기 마음에 드는 손님을 골라 태우는 것이다.

택시 앞좌석 잘 보이는 곳에 붙어있는 ‘승하차시 승객에게 인사하기’ ‘승객에게 미소짓기’ ‘상냥하게 대화하기’ 등 택시고객 서비스 현장이라는 스티커는 요구하고자 한다.

▲김용목·광주시 서구 화정동

## 시설

## 사회문제된 외국인 범죄 대책 시급하다

광주·전남지역 외국인 범죄가 사회 문제화되고 있다고 한다. 범죄 건수가 날로 늘고 있는데 그 유형도 다양화·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전남지역의 외국인 범죄인은 지난 2004년 140명에서 2005년 202명으로 1년 새 45%나 증가했다. 지난해는 155명으로 줄었지만 이는 범죄가 줄었다기보다는 해마다 해마다 지능범죄에 대한 경찰서는 26개 경찰서 가운데

회적 현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외국인 동향 파악과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의 의사행정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업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 경찰청 내 외국인 관련 업무는 과도 아닌 일개계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외사가 있는 경찰서는 26개 경찰서 가운데 광양과 여수 2곳뿐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외국인 범죄 예방과 수사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

범죄 유형도 폭력이나 절도 등 강력 사법에서부터 위장결혼과 같은 지능범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지능범은 2~3년 새 50~60%나 늘었다. 이는 우리 사회에 외국인 범죄가 일 반화였음을 의미한다.

광주·전남지역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지난 2004년 9천800여 명에서 1만6천여 명으로 불과 2년 새 63%나 증가했다. 급속히 다국적화되는 사회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사

## 대학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해야

국·공립 및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면서 대학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 14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한 ‘서울지역 대학생 교육대책위원회’는 지난 22일 “브레이크 없는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을 치안수요를 확보해온 등록금 인상으로 대학에 차운수요를 감안해 인력과 예산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등 대학마련을 서둘어야 할 것이다. 이미 사회문제화된 외국인 범죄를 더 이상 느슨하게 다뤄서는 안 될 일이다.

하지만 재정수요를 등록금 인상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립대학은 예산의 70~8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지만 재단이 내놓는 전입금은 9%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적립금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학까지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대학들은 재정난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문제는 인상폭이다. 상당수 대학이 10% 내외, 일부에선 20~30%까지 겸토하고 있다고 한다. 학부모의 부담은 지금도 적지 않다. 지난해 1인당 연간 평균 등록금은 국·공립대 342만6천원, 사립대 642만2천원에 달했다. 일부 학과의 등록금은 1천만원을 넘었다.

대학들은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 대학측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단이 내놓는 전입금은 9% 안팎에 불과하다. 특히 적립금이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대학까지 큰 폭의 등록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정치권에서 ‘반값 등록금’과 물가상승률을 기준으로 등록금 인상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등록금 부담이 너무 높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학들은 등록금 납부 거부 투쟁이나 총장실 점거 사태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합리적 수준에서 인상률을 결정하기 바란다.

## 無等鼓

요즘 희귀화폐 수집 인기가 대단한 모양이다. 새 지폐가 발행될 때 화폐 수집가들이 수입 전부터 한국은행 앞에 장사진을 치는가 하면 기념주화 발행 때 예약주문이 넘쳐난다.

우리나라엔 현재 3단여명의 화폐 수집가가 있고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화폐는 희소성, 보존상태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 오래된으면서도 깨끗한 화폐 일수를 가격이 높다.

얼마전 한 경매에서는 몇 개 없는 1906년 발행 20원짜리 금화가 1억2500만원에 낙찰되기도 했다.

지폐는 일련번호 조합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111111’처럼 하나의 숫자로 이뤄진 solid note나 ‘2571752’처럼 앞뒤 어디에서 읽어도 번호가 같은 팔린드롬(palindrome), 둘째 자리부터 ‘0’ 만 계속되는 밀리언 노트(million note) 등의 번호를 가진 화폐가 높은 가격대를 형성한다. 몇 개의 번호가 반